

# 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

## 복지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VIP Report | 2013.5.15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boardid=1,2,8,38,125,126,127,128,129,5,132&column=&numIdx=18950&skin=&mode=&GotoPage=2&keyword=&firstDepth=1&fourthDepth=&secondDepth=0&sortBy=&thirdDepth=>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해 50 대 이상은 만족, 20-30 대는 불만족

향후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금과 복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

- 배경
  -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재정, 특히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문제가 청년실업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세대 간 갈등요소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
- 복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 국민의 55.2%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경제수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생각
  - 20 대(51.6%)와 30 대(55.0%)는 복지 우선, 50 대 이상(72.6%)은 성장 우선
  -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복지혜택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며, 노년층도 자신들의 복지보다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우선 배려로 세대 간 갈등의 봉합가능성이 큼
  - 노후준비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1 위(22.5%)이나,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
- 시사점
  - 향후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금과 복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
  - 세대 간 복지갈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여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기회로 활용
  - 국민연금은 수급시기 조절을 통해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모색이 필요

#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보고서 | 2012. 12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research/view.jsp?bid=12&ano=1514&key=&query=&year\\_value=0&content\\_type=1&queryS](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research/view.jsp?bid=12&ano=1514&key=&query=&year_value=0&content_type=1&queryS)

## 복지요구의 증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증세가 필요

### 보편복지의 확대방안은 조세체계의 누진성 강화 후 보편증세 방식 채택

- 배경
  - 선진 복지국가들은 복지정책 및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마련과 복지제도의 개혁 단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양적 규모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하는 한 모든 분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복지재원 조달방안
  1. 재원조달 방법은 국가채무 증대, 조세부담 증가, 국가채무와 조세부담 증가의 결합 등
  2. 재원조달을 위한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조세 수입 결합의 최적점 모색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선진화를 통한 재원확보
  4. 복지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적절한 자원배분도 필요
  5. 복지재정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합의와 함께 조세수입 구조의 조정
-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전략
  1. 복지요구의 증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증세가 필요
  2. 보편주의 복지모델은 선별적 복지모델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용이
  3. 보편복지를 확대하려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한 후 보편증세의 방식을 채택

# 기업의 新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 CEO 인포메이션 제 891 호 | 2013.4.10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02&submenu=&nPage=3&pubkey=db20130410001>

## 기업의 新경쟁력 확보방안은 빅데이터 큐레이션 능력의 확보,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활용성 제고, 큐레이션 고도화로 빅데이터의 한계 극복

- '빅데이터 큐레이션'이란 빅데이터를 최적으로 구축하고 분석 및 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지휘하는 활동
- 빅데이터 큐레이션의 5대 활용 분야
  1. 실시간 예측 및 자동 업데이트로 미래 예측의 정확도 향상
  2. 소비자의 일상생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패턴을 발견해 숨은 니즈 발견
  3. 정성적 정보를 대폭 확보함으로써 관리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와 정확도를 높여 리스크 경감
  4. 고객 개인별로 차별화해 스팸이 아닌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5. 고객과 경영환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대응
- 시사점
  1. 기업은 빅데이터 큐레이션 능력의 시급한 확보가 필요
  2.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는 국가의 자연환경, 인프라, 국민경제활동, 일상생활 등을 포괄하고 있어 규모가 크고 활용 가치가 높음
    - 개별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간 연계 강화와 개방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3. 큐레이션 고도화로 빅데이터의 한계 극복
    -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최신기술과 전문가의 지혜를 더해 보다 세련된 큐레이션 가능
    - 빅데이터의 부작용으로 우려되고 있는 정보보안 리스크도 빅데이터 기술의 심화·발전으로 해결 가능

#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주평 | 2013.4.29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

## 고령화가 심각한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전기 마련

### SOC 건설과 개보수를 위한 민관파트너십의 활성화

- 배경
  - 최근 고령화된 인프라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안전우려도 커짐
  - 국내 인프라 시장규모는 2011 년 현재 230 억 달러(25.5 조원) 정도로서 GDP 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큼
- 인프라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점
  - 운송인프라의 고령화율은 6.3%로 양호하나, 항만(13.1%)과 옹벽(12.7%)은 평균을 상회
  - 수자원인프라의 고령화율은 20.5%로 매우 높으며, 댐은 55.9%, 하천시설은 20.1%
  - 산업인프라의 고령화율은 54.2%로, 구로, 여수, 울산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필요
- 시사점
  - 인프라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자원’, ‘철도’, ‘산업단지’ 등에 대한 유지·보수·교체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의 전기 마련
  -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프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인프라 평가시스템’의 구축
  - 2013 년도 24.3 조원의 SOC 예산 중 유지관리비를 현재의 20% 정도에서 30%로 확대
  - SOC 건설과 개보수를 위한 예산 증가가 갈수록 어려울 것이므로 민관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활성화

# 전통시장 강소상인에게 배우는 지혜

삼성경제연구소 | CEO 인포메이션 제 889 호 | 2013.3.27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02&submenu=&nPage=4&pubkey=db20130327002>

**상인은 성공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이를 자기 사업에 접목하고, 정부는 유관기관의 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전통상인의 성공사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산**

- 기로에 선 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매출은 2006 년 29.8 조원에서 2012 년 21.1 조원으로 감소
  - 전통시장의 수는 2004 년 1,702 개에서 2012 년 1,511 개로 감소, 종사자는 35.4 만명
  - 전통시장의 경쟁력 저하 및 활성화 저해요인 중에는 ‘상인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고, 전통시장 이용고객 중 65.1%가 재이용이나 추천 의향이 없다고 응답
- 강소상인 양성을 위한 제언
  - 상인은 마케팅·제품·운영 혁신 가운데 중점 혁신전략을 선정하되 여타 혁신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성공사례의 적극적인 벤치마킹과 자기 사업에 접목
  - 정부는 유관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 언론, 기업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전통상인의 성공사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산

# 추격 관점의 제조업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3.2.27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8&state=view&idx=36480](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8&state=view&idx=36480)

한국산업의 성공요인을 타 부문으로 확산 유도, 후발국의 추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선진국에 대한 추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 추진

- 현황
  -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은 일부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제조업 전반이나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경쟁력은 아직 낮은 상태
- 정책적 시사점
  1. 추격성과 제조업 경쟁력
    - 선진국을 더 많이 추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발국으로부터 추격을 덜 받는 것도 매우 중요
  2. 적극적 산업협력 전개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침체, 중국의 급부상, 한국의 도약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상황은 오히려 동아시아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3. 추격성과의 확산
    - 추격성과가 우수한 부문의 강화와 추격이 부진한 부문의 향상 방안이 필요
    - 한국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타 부문으로의 확산 유도
  4. 신흥시장의 중시
    - 추격성과의 유지·강화를 위해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
  5. 탈추격·개방형 혁신 추진
    - 후발국의 추격을 최소화하는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선진국의 추격을 극대화하는 탈추격 및 개방형 혁신 추진

# 카셰어링 수요분석 및 지역별 사업타당성 분석방법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보고서 | 2012.12.31

[http://www.koti.re.kr/board/report/index.asp?code=research\\_report&cate=2&mCode=040200](http://www.koti.re.kr/board/report/index.asp?code=research_report&cate=2&mCode=040200)

카셰어링 수요분석 결과 투입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미미하므로 카셰어링을 대중교통수단의 보조수단으로 보고 복합수단의 시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카셰어링의 활성화에 일조

- 배경
  - 최근 정부시책에 힘입어 카셰어링 서비스를 교통수요 관리대책 및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발히 검토
- 카셰어링 사례 및 수요그룹 분석 결과
  - 카셰어링의 주요 이용자는 개발밀도가 높은 도심에 거주하는 30~40 대와 2 인 이하 가구의 고학력자로 소득수준이 다소 높고 통행거리가 길지 않은 사람들
  - 카셰어링이 잘 운영되는 지역은 주차가 어려운 지역, 대중교통체계가 잘 구축된 지역, 복합용도의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 등
  - 통행량 감소를 목표로 한 카셰어링 서비스는 부적절한 대책이며, 카셰어링 서비스 수요그룹은 매우 제한적임
  - 서울시의 경우 통계지표 분석과 통행량 분석 결과 투입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미미함
- 정책 제언
  - 카셰어링 서비스는 차량소유의 감소, 통행량 및 통행거리 감소, 주차공간 절감 등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므로 수요그룹 확대를 통한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
  - 공공이 택시의 차량대수 감소와 요금 인상 등의 규제를 하면 수요그룹은 확대될 것
  - 카셰어링 서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보조수단으로 보고 비영리로 운영하여 복합수단의 시행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카셰어링의 확산에 일조

#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사례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2.12.31

[http://www.krihs.re.kr/html/2\\_paperInfo/report\\_read.asp?id=3597021&page=1&search\\_kind=0&search\\_text=한국의 건강&search\\_text1=&r\\_kind](http://www.krihs.re.kr/html/2_paperInfo/report_read.asp?id=3597021&page=1&search_kind=0&search_text=한국의 건강&search_text1=&r_kind)

**건강장수도시를 구현하려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 사회적 여건 조성, 인식 전환이 필요**

- 건강장수도시란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활기차게 나이들 수 있는 도시
- 건강장수도시의 특징 및 시사점
  1. 원주시
    - 시민의 건강증진이 시정의 최우선 목표
    - 지역적, 계층적 격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교한 사업추진이 필요
  2. 창원시
    -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
    - 전담부서 및 과학적인 운영체계 등의 구축과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중요
  3. 서울시 강동구
    - 녹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녹지 간의 연계성 강화
    -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확고한 정책적 기조가 필요
  4. 제천시
    - 지역의 청정한 생태환경자원에 기초하여 건강도시를 브랜드화
    - 건강도시 조성정책이 시민의 건강성과 삶의 질 제고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5. 울릉군
    -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장수 자원 활용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환경관리, 시민의 건강실천 수준 제고에 대한 실천전략이 필요
  6. 광양시
    - 시민건강 증진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건강도시 운영조례’ 제정
    - 건강장수도시 만들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
- 정책제언
  - 건강장수도시를 구현하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시민의 생활양식 및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 건강장수도시 조성정책이 시민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구현해가는 것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
-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  
email: [urbandata@si.re.kr](mailto:urbandata@si.re.kr)  
phone: 02-2149-1022